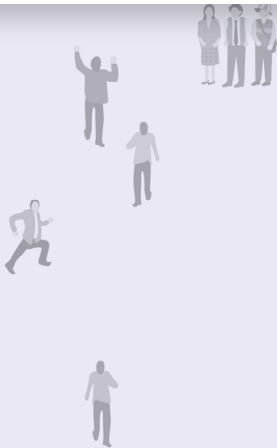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321	경찰청	380
산업통상자원부	334	국가보훈처	381
특허청	337	국방부	382
관세청	337	방위사업청	386
환경부	337	병무청	387
국토교통부	345	문화·체육관광부	389
기상청	357	문화재청	391
보건복지부	359	방송통신위원회	392
여성가족부	367	미래창조과학부	393
법무부	371	농림축산식품부	397
교육부	373	식품의약품안전처	405
고용노동부	374	산림청	406
인사혁신처	378	해양수산부	415
행정자치부	37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획재정부			
1.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제외	□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 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 배업 제외) 소득세 과세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 회 의결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1)
2.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 과 합산하여 과세 □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 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 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서만 공제	□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규 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 ’14~’16년 소득분 비과세 ○ ’17년 이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 회 의결	소득세법 (’14.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1)
3.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 서 발급 및 전송이 가능	□ 다음의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 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진발급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1)
4.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 신 설 〉	□ 다음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을 의무화	소득세법 시행령 (2015.5.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전세버스 운송업 ○ 장의관련 서비스업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p>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1)
5.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월세지급액의 60%를 소 득공제(500만원 한도)	□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750만원 한도)	소득세법 (’14.1.1)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 금액 4천만원 이하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 만원 이하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p>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 증: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비: 30%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 카드 ·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 가한 금액’: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14.7.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div>- 300만원</div> <div>-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div> <div>○ 적용기한: '14.12.31.</div>	<div>○ (좌 동)</div> <div>○ 적용기한: '16.12.31.</div> <div><small>※</small>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div>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table><tr><th>차입금요건</th><th>공제한도</th></tr><tr><td>○ 만기 15년 이상 < 신 설 >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기 타</td><td>1,500만원</td></tr><tr><td> < 신 설 ></td><td>500만원</td></tr></table>	차입금요건	공제한도	○ 만기 15년 이상 < 신 설 >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기 타	1,500만원	< 신 설 >	500만원	<table><tr><th>차입금요건</th><th>공제한도</th></tr><tr><td>○ 만기 15년 이상</td><td rowspan="3">1,800만원 (좌동) (좌동)</td></tr><tr><td>-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td></tr><tr><td>- (좌동)</td></tr><tr><td>○ 만기 10년 이상</td><td rowspan="2">300만원</td></tr><tr><td>-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td></tr></table> <div><small>※</small>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div>	차입금요건	공제한도	○ 만기 15년 이상	1,800만원 (좌동) (좌동)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좌동)	○ 만기 10년 이상	300만원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소득세법 ('15.1.1)
	차입금요건	공제한도																
	○ 만기 15년 이상 < 신 설 >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기 타	1,500만원																
	< 신 설 >	500만원																
차입금요건	공제한도																	
○ 만기 15년 이상	1,800만원 (좌동) (좌동)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좌동)																		
○ 만기 10년 이상	300만원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8.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div><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div> <div>○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div> <div>○ (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추 가></div> <div>○ (700만원 한도 적용)</div>	<div>○ (좌 동)</div> <div>○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div> <div>-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div> <div>○ (좌 동)</div>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 자 의료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 율 적용 적용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헤드쿼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폐지 그 외 기업 : 2016년 12월 31일 (2년 연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2)
10.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 0세 이상) 및 장애인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 농업, 임업, 제조 업 등 주점 및 비알콜 음료 	<input type="checkbox"/> 감면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 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점업, 금융보험업 등 제외 ◦ 적용기한: '15.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11.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직전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 ◦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 은 자 ◦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 지 않을 것 ◦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	□ 신청 대상 확대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2)
12.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납입금액 기준으로 400 만원까지 12%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 액을 합하여 납입금액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하 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 금액 기준으로 300 만원까지 12% 세액공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3)
13. 자녀장려세제 도입	〈신 설〉	□ 총소득기준 4,000만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 로장려금과 동일	조세특례 제한법 ('15.1.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 생계급여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소득세제과 (044-215-4154)
1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확대적용 시기는 당초 계획상 '14년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input type="checkbox"/> 지급대상 확대를 법령에 명확화 ○ 자영업자 포함 ※ 자영업자 확대적용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14년 소득분부터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15.1.1)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금의 수급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급여를 받은 자 ○ 외국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input type="checkbox"/> 수급 제외자 축소 <삭 제> ○ (좌 동)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4)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원칙)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중소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 (예외) 중소신고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좌 동) ○ 신청방법 예외 추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중 소신고한 것으로 간주</p> <p>- 확정신고의무 없는 자 *</p> <p>*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등</p> <p>- 일용근로자</p> <p>〈추 가〉</p>	<p>-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p>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p>	
15.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p>□ 근로장려금의 수급 재산 기준</p> <p>○ 1세대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가격 6천만원 이하)</p> <p>○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p> <p>* 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예·적금 등, 골프장 회원권 등</p> <p>〈신 설〉</p>	<p>□ 주택·재산기준 완화</p> <p>○ 주택 가격기준 삭제</p> <p>○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p> <p>□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까지는 근로·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p>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p>	조세특례 제한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4)
16.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p>□ 기한후 신청기간</p> <p>○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p> <p>*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p>	<p>□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p> <p>○ 3개월 → 6개월</p>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p>	조세특례 제한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간	2014년 세법개정안	(044-215-4154)
17. 역외탈세 방지강화	①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판정기준 ○ (원칙) -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좌 동) -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소득세법, 상속세법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2)
	② 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input type="checkbox"/> 국외재산 증여시 증여세 특례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 세 과세 ○ 이 경우 외국에서 증 여세가 과세되면 국내 에서 과세면제	○ (좌 동) ○ (좌 동) -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 계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 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제조세조정예관 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③ 국제 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국제 부과제척 기간 연장	<input type="checkbox"/> 국제부과제척기간 ○ 상증세 이외 국제 - 원칙 : 5년 - 무신고 : 7년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0년 <신 설> ○ 상증세 - 원칙 : 10년 - 무신고, 허위·누락,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5년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15년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제기본법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④ 국제 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신고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20% - 부정행위: 40%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소신고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10% - 부정행위: 40%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small>☞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small>	국세기본법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벌금 인상	<input type="checkbox"/> 미신고 과태료 :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미소명 과태료 : 미소명 금액의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형사처벌(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 : 미신고금액 1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input type="checkbox"/>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input type="checkbox"/> 미소명 과태료 인상 : 미소명 금액의 20% 이하 <input type="checkbox"/> 형사처벌 강화 : 미신고금액 2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⑥ 해외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확대	<input type="checkbox"/> 탈세 등 신고시 포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 대상 및 포상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탈루, 부당환급 등 신고: 탈루세액 × 5~15% 채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징수금액 × 5~1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거부, 허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국세기본법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위발급 신고: 거부금액 × 20%(50만원 한도)</p> <p>④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건당 100만원</p> <p>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무 위반 신고(다만, ①,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과태료 · 벌금 × 5~15%</p> <p>○ 포상금 지급 한도: 20억원</p>	<p>⑤ ①,②에 따른 포상금과 별도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p> <p>○ (좌 동)</p>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p>	
⑦ 국제거래명세서 신고 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p>○ 제출의무 대상 자료 및 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명세서(과세표준 신고시) - 계약서, 가격표, 명세표 등(과세당국 요구 시) <p>○ 과태료 부과 <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가격표, 명세표 등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p>○ (좌동)</p> <p>- 국제거래명세서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 <p>- (좌 동)</p>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p>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5)
⑧ 해외부동산명세서 제출의무	□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 자료제출 의무	○ 제출자료	□ 제출자료 확대	소득세법, 법인세법 ('15.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확대 및 과태료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추 가> <p>□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 <p>□ 과태료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의 1% 이하 (5천만원 한도)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p>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2)
	⑨ 과소 자본세제 적용 기준 강화	<p>□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 불산입 ○ 업종별 배수 - 일반 업종: 3배 - 금융업: 6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 (좌 동) - 일반 업종: 2배 - (좌동)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p>	국제조세조정예관 한법률 (15.1.1)
	⑩ 특정 외국법인 (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개선	<p>□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지배관계 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과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을 것 ○ 특수관계 여부 판정시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주식도 포함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p>	국제조세조정예관 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㉑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 조정제도 도입	〈신설〉	<input type="checkbox"/>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시기: 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APA) 신청시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 신청대상: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 조정방법: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small>☞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small>	국제조세조정예관 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4)
	㉒ 내국 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 소득에 대한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input type="checkbox"/>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자회사: 모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 보유 	<input type="checkbox"/> 지분율 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자회사: 모회사가 25% 이상 직접 주식보유 <small>☞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small>	법인세법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2)
	18.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신 설〉	<input type="checkbox"/>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서면 자진 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세액의 30% 경감(15만원 한도) 	관세법 (‘15.1월)
		<input type="checkbox"/>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	<input type="checkbox"/>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에 30%의 가산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율을 40%로 상향조정 	(044-215-4412)
	<p>〈 신 설 〉</p>	<p><input type="checkbox"/> 반복적인 자진신고 불이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 ◦ 60% 가산세율을 적용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p>	
19.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과세가격의 60%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과세가격의 40%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p>	관세법 ('15.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3)
20.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p><input type="checkbox"/>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단일 	<p><input type="checkbox"/> 관세채권 규모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차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원 이상 : 10년 ◦ 5억원 미만 : 5년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p>	관세법 ('15.1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21.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p><input type="checkbox"/>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p><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기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p>☞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p>	관세법 ('15.1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2. FTA특례법 전면개정	<input type="checkbox"/> 법령 체계 ◦ 36개 조문	<input type="checkbox"/> 법령 체계 정비 ◦ 46개 조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5.5.1)
	<input type="checkbox"/> FTA 일반원칙 미규정	<input type="checkbox"/> FTA 일반원칙 ◦ 협정관세 적용요건 ◦ 원산지 증명원칙	
	<input type="checkbox"/>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 자 권리보호 미비 ◦ 조사대상자의 협정관 세 적용보류 ◦ 원산지조사시 납용권 금지조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 납세담보 제공시 협정관세 적용 ◦ 원산지조사시 조사권 남용금지 ◦ 협정관세 적용배제시 가산세 징 수·감면 등의 근거 신설	
	<input type="checkbox"/> 하위법령 규정(시행령) ◦ 원산지인증수출자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 관세청 지도·감독 근거	<input type="checkbox"/> 하위법령 규정 법률근거 명확화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해제 근거 신설 ◦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한 자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 정하는 근거 명확화 ◦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 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료제 출 요구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 449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자유무 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1.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완화	㉠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 법인(SPC) 에 대한 자격요건 자들의	◦ 100%	경제자유구역법 (’15. 7월)
		◦ 70%로 완화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알림· 뉴스>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	산업통상 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 46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필요적 출자비용			
	② 경제 자유구역 내 항만 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알림·뉴스>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p>	경제자유구역법 (‘15. 1월) 산업통상 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4613)
2.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노인·아동·장애, 98만 가구)을 대상으로 동절기(‘15.12~’16.2)에 총 10만원 내외의 에너지바우처 지급(‘15.12)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너지법 및 에너지법 시행령</p>	에너지법 (‘15.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044-203-5124)
3.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 산업시설구역에는 13종의 지식산업만 입주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산단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8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31)
4. 계량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 보호	① 계량기 수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거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수거명령토록 함 	계량에 관한 법률 (‘15.1월)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6)
	② 과징금· 공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가능토록 	계량에 관한 법률 (‘15.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하고, 필요한 경우 위반업소명을 공표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6)
	③ 정량 표시상품	곡류, 우유, 설탕 등 식료품 위주의 26종에 대하여 정 량을 표시토록 규정	◦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정량을 의무적으로 표 시하도록 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1월)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6)
5.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의무 를 부과	① 안전 관리대상 어린이제 품 범위	◦ 완구, 유모차 등 40개 품목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 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안전 관리대상을 확대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예산법 령>입법예고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15. 6. 4)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3)
	② 어린이 제품 사고보고 의무화	◦ 결함으로 인한 사고보 고 의무규정은 있으나, 보고시한 및 보고대상 미비	◦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 사실등을 알게 된 경우, 결함여 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자는 48시간 이내에 사고내용을 정부 에 보고해야함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예산법 령>입법예고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15. 6. 4)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3)
	③ 불법제품 판매중개, 수입·구 매대행 행위 금지	◦ 제조·수입·판매·영 업자에 대해서만 불법 제품 취급금지를 규정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인증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구매를 대행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 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를 부과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예산법 령>입법예고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15. 6. 4)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허청			
1. 특허청고시 사용명칭으로 출원한 경우 할인	◦ 62천원	◦ 56천원으로 인하(특허청고시 상 품명칭으로 전자출원한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5. 1월)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 481-5267)
관세청			
1.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율 인상	◦ 납부할 세액의 30%	◦ 납부할 세액의 40%	관세법 제241조 (’15. 1. 1)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4)
	◦ 신 설	◦ 반복적인 신고 불이행자(2년내 2회이상) : 납부할 세액의 60%	관세법 시행령 (’15.1월중 개정예정)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4)
환경부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 스 배출을 직접규제 ◦ 제도 대상(관리업체), 목표를 매년 결정 ◦ 사업자 또는 업체 단 위로 관리업체 지정 ◦ 온실가스 감축으로 목 표 달성 ◦ 목표량 보다 초과로	◦ 기업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 여 자율적으로 배출권을 거래 ◦ 제도 대상(할당대상업체), 목표 를 계획기간 단위로 지정 * 1차 계획기간은 3년으로 설정 (’15~’18) ◦ 업체 단위로 할당대상업체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15.1.1.)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추진기획단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 없음 ○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최대 1천만원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 외, 배출권 구매, 배출권 차입, 상쇄를 통해 목표 달성 가능 ○ 목표량 보다 초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잉여 배출권 판매 또는 배출권 이월 가능 ○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행하지 못한 실적에 비례하여 과징금 <p><small>☞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정책이슈>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게시판</small></p>	(02-6943-1305)
2.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시행·보고·신고 등의 의무이행 필요	①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제도 신설	○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한 장의 서식으로 보고 ○ 최초의 보고는 '16.6.30일까지이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판매자란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음 <p><small>☞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공포 (12월중 예정)</small></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15.1.1)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771)
	② 화학물질의 등록 대상 확대	○ 연간 1톤 이상의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신청제도	○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15.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시 제조·수입 불가되며, 판매중지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고시('15년 상반기중 최초 고시 예정)되며, 3년간 등록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됨 <p>☞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p>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771)
[3] 화학물질 안전정보 의 제공	○ 신규	○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p>☞ (참고)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15.1.1)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771)
[4] 유해화학 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신설	○ 신규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 전(총량 연간 1톤 초과 확인시) 또는 다음해 4월30일(총량 확인 곤란시)까지 신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p>☞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15.1.1)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77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⑤ 위해우려 제품 안전관리 제도 신설	◦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는 위해우려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려면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12.1.1)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771)
3.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① 화학물질 관리주체 일원화	◦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자 관리를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15.1.1)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② 취급시설 설치 시 장외영향 평가서 제출	◦ 사전 검토 없이 취급시설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검토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강화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③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주체의 변경	◦ 주로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후 검사결과를 환경청에 제출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15.1.1)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④ 사고대비	• 기존 자체방제계획은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를 위한 위해관리 계획 제도 시행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면제 규정이 많아 실효성 부족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 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 >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15.1.1)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3.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	◦ CO ₂ 배출량 97g/km 이하인 중 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 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한 구매자에게 보조금 100만원 지 급(‘15.1.1일 출고분부터)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환경부,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시행’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 -6927)
4.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및 입지 기준		◦ 검출한계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먹는물 수준)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 입법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11.24)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6)
5.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 신규	◦ 제조·수입업자의 어린이용품 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에 대한 함유여부 및 함유 량 표시 의무화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어린이 활동공간·용품 유해물질 사전에 관리한다	환경보건법 (‘15.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6. 토양 오염	① 오염토지	◦ 신규	◦ ‘96.1.6 토양법 시행 이전 양도 등의 사유로 해당토지를 소유하	토양환경보전법 (‘15.3.2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화책임 체계의 합리적 강화	소유자의 정화책임 면책		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시행 이전 토지를 양수한 경우 오염토지 소 유자의 정화책임 면제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 환경부,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한다'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 -7177)
	② 과도한 정화비용 발생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 신규	◦ 과도한 정화비용이 발생하는 경 우 정화책임자에 대한 국가의 비 용지원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 환경부, '토양오염 정화책임 체계 합리성 강화한다' 시행령 입법예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5.3.25.)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 -7177)
	③ 토양정화 자문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 신규	◦ 위원장 및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규정 - 위원장은 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 - 위원은 토양환경분야의 전문가 (10년 이상 종사자, 교수, 변호 사, 관계공무원 등)로 구성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 환경부, '토양오염 정화책임체 계 합리성 강화한다' 시행령 입법예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5.3.25.)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 -7177)				
7. 가축 분뇨관리 선진화	① 공공처리 시설 설치·운 영 주체 추가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은 지자체장이 설치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 영 주체에 농협조합을 추가 ⇒ 농가 지원 확대, 고품질 퇴·액 비 생산·유통을 유도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 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3.25)
				환경부 유역총량과(044- 201-70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② 불법축사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신설	◦ 무허가·미신고 시설 은 고발	◦ 고발 조치 외에 사용중지, 폐쇄 명령 신설, 사용중지명령에 갈음 하는 과징금 신설 ⇒ 불법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 정처분 근거를 마련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 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3.25)
				환경부 유역총량과(044- 201-7021)
	③ 가축분뇨 실태 조사 실시	◦ 신규제도	◦ 토지에 출입하여 가축분뇨 등으 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실 시 ⇒ 조사결과를 관련 정책 수 립·추진에 활용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 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3.25)
				환경부 유역총량과(044- 201-7021)
	④ 가축분뇨 퇴비·액비 화의 기준 신설	◦ 퇴비·액비는 비료공 정규격에 따른 기준 준수	◦ 「비료관리법」 적용 제외 대상인 퇴·액비에 대한 품질·검사 기 준 신설 ⇒ 양질의 퇴비·액비 생산을 유도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 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3.25)
				환경부 유역총량과(044- 201-7021)
8.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단가 조정		◦ 250원/㎡	◦ 300원/㎡으로 조정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15.1.1)
				환경부 자연정책과 (044-201-7224)
9.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 건축용, 자동차 보수 용, 도료표지판용 도료	◦ 건축용, 자동차 보수용, 도료포 지판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관리 강화	<p>의 VOCs 함유기준 (g/L)을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용 도료(콘크리트·시멘트·몰타용 등)의 경우 수성무광 40 이하, 유성내부 400 이하 등 기준 설정 - 자동차보수용 상도-topcoat 500 이하 등 기준설정 -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수성 200 이하, 유성 450 이하 등 기준 설정 <p>○ < 신 설 ></p> <p>○ < 신 설 ></p>	<p>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용 도료(콘크리트·시멘트·몰타용 등)의 경우 수성무광 35 이하, 유성내부 200 이하 등 - 자동차보수용 상도-topcoat 500 이하 등 -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수성 170 이하, 유성 400 이하 등 기준설정 ○ 선박용 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오도료 500 이하, 무독성 방오도료 450 이하 등 기준 설정 ○ 철구조물(강교용)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750 이하,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성 50 이하 유성 650이하 등 기준 설정 <p>☞(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p>	<p>제61조의2 별표16의2 (15.1.1)</p> <p>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1)</p>
10.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p>○ < 신 설 ></p> <p>○ 일부 도장시설만 대기 오염 배출시설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금속·기계·기기·장비·운송 장비·가구 제조시설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p>○ < 신 설 ></p>	<p>○ 보일러중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며 시간당 증발량이 2t/h 또는 1,239,000kcal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포함</p> <p>○ 배출시설의 업종에 구분없이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적이 5m³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p>○ 솥가마 등 대기배출시설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적이 30m³이상인 육장업의 솥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 용적이 150m³이상인 솥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솥가마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15.1.1.)</p> <p>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1)</p>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토교통부			
1. 2세대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신설	○ (지원대상 확대) 주택건설자금 및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국한되던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 ○ (지원방식 다변화) 민간자금을 임대주택·도시재생사업에 유치 하기 위하여 단순 융자 외 출자, 투·융자 등 지원방식 다변화 ○ (전담 운영기관) 자금관리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주택도시기금법 (2015.07.0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7)
2. 통합 전세상품(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 금리 연 3.3% : 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5.5천만원) : 수도권 1억, 지방 8천만원 한도 : 최장 8년 가능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금리 연 2.0% : 지자체장 추천(최저생계비 2배 이내 등)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4백만원 한도 등 : 15년	○ 버팀목 전세대출 : 금리 연 2.7~3%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 우대) : 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5.5천만원) : 수도권 1억, 지방 8천만원 한도 : 최장 10년 가능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주택법 제63조 제1항제8호 ('15.1.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
3.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대상) ①취업준비생,	주택법 제63조 제1항제8호 ('15.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②희망키움통장(I, II)가입자, ③근로장려금수급자 ○ (금리)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보증 등) 월세 미반환 위험회피를 위하여 월세대출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체일수가 적은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금리우대(0.2%p)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
4. 주택 청약제도 전면개편	①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 대주) 완화	○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공급	○ 세대주 요건을 폐지(세대원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세대주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청약허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 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은 1순위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후, 다시 2순위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 이후 3순위는 추첨 (총 13단계) * 1순위 :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 2순위 : 6개월, 6회 이상 - 민영주택(85㎡ 이하)	○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 6개 순차를 2개 순차로 통합 * 1순위 :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 국민주택은 1순위 중 2개 순차에 따라 선정한 후, 2순위 추첨제 - 민영(85㎡ 이하)은 1순위 중 40% 가점 및 60% 추첨제, 2순위 추첨제 (민영 85㎡ 초과는 1순위 및 2순위 모두 추첨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은 1순위 청약자 중 40% 가점 및 60% 추첨제, 다시 2순위 청약자 중 가점 및 추첨제, 이후 3순위 추첨 (총 5단계)</p> <p>* 민영주택 85㎡초과는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100% 추첨</p>		
[3] 입주자 저축 예치금액 변경 기간 등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주택규모 변경 가능(규모 상향시는 추가로 3개월 지나야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규모 변경(2년) 및 청약제한(3개월) 기간 폐지하여 즉시 청약 허용 예치금액 이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 허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4]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최대 32점)을 받고 있으나, 유주택자(2주택 이상)는 이와는 별도로 감점 (1채당 5~10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 기준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5]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 및 배우자가 일정한 기준의 소형·저가주택(전용 60㎡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1채) 보유시 무주택자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집값 편차 등을 고려하여, 소형·저가 주택 기준을 완화(전용 60㎡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3억, 지방 8천만원 이하 1채) 소형·저가 주택 기준 적용 대상을 세대구성원 전체로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6] 청약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유형 4개(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통장, 청약종합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형 단순화	약부금, 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지하고, 기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 까지 현행 통장 목적대로 사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⑦ 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	○ 공급주택 유형 3개(국 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 유형을 2개로 통합 (민간건설 중 형국민주택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7)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5. 파독 근로자 체육유공 자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	① 파독(派獨) 근로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 신설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5년간 한시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② 대한민국 체육유공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 신설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에게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 특 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6.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 임대유기기간 : 10년 - 별도 조례로 용적률 상한선을 규정 - 연립 · 다세대 주택 의 경우 4층으로 층 수가 제한	- 임대유기기간 : 8년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을 법적 상한까지 부여 - 연립 · 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 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 한 완화 <small>(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 책 발표,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small>	임대주택법 (‘15.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15년. 7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기획과 (044-201-3355, 33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70만 가구 ◦ (월평균급여) 9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97만 가구 ◦ (월평균급여) 11만원 <p>☞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내년 6월 또는 7월 본격 시행</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15. 6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9)
8. 대한지적공사의 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대한지적공사 ◦ 업무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3.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 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4.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5.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6. 그 밖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한국국토정보공사 ◦ 업무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공간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자의 업무범위(지적측량업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연구·기술 개발·표준화 및 교육 사업 3.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국가공간정보 기본법('15.6.4)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5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국가공간정보 제공대상확대		◦ 사전에 등록된 공간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가능	◦ 공간정보 제공대상을 ‘공간정보사업자’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자’로 확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15. 6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3)
10. 공익 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시 영업손실 보상등 확대	① 영업휴업 보상기간 등 확대	◦ 3개월 이내 보상	◦ 4개월 이내 보상 ◦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휴업보상분의 20%, 1천만원 상한)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소상공인 휴업보상액 약 60% 확대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10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②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 5백만원	◦ 6백만원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소상공인 휴업보상액 약 60% 확대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10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11. 보상전문기관 확대		◦ LH공사 등 8개 기관	◦ 21개(부산도시공사 등 13개 추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0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12.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개선	① 매매 6억~9억, 임대차 3~6억 구간 중개보수 요율 신설	매매/임대차 0.9%/0.8% 이 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 매매 6~9억 구간 요율 0.5% 이하 ○ 임대차 3~6억 구간 요율 0.4% 이하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 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시·도 조례 (‘15.2~6월예정)
			각 시·도 토지관리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12.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개선	② 85㎡ 이하 일정설비 (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신설	0.9%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 매매 0.5%, 임대차 0.4%이하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 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4.12~’15.1월 예정)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13.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개발사업 구역내의 진 입로 공사비만 인정 ○ 7개 부담금만 개발비 용 인정 (농지보전부담금, 대체 초지조성비, 수도원인 자부담금, 하수도 원인 자 부담금, 광역교통시 설부담금 등)	○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한 경우 개발사업 구역외의 진입로 개설비용을 공사비로 인정 ○ 7개 부담금을 추가로 개발비용 으로 인정 (학교용지부담금, GB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 부담금, 도시개발구 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 용부과금 및 추가 설치비용부담 금,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생 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 보 전협력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15.1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 34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과개시시점(인허가)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준공) 이후**에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 조사및설계 등을 위해 사전 투입된 비용 ** 지목변경수반취득세, 양도소득세(법인세)등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14.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온라인 포털의 구인·구직 기능은 단순 공지나 입사지원 정도로 국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협회별로 운영중인 구인·구직 시스템을 “건설워크넷”으로 통합 건설분야 일자리를 한분에 확인 가능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소 ‘14.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별로 별도 구인·구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경력자료를 직접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인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인·구직 지원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 보도자료>구인·구직정보 한곳에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6)
15. 취약 시설물의	① 취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급에 상관없이 받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시설물(D,E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받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점검 실시횟수 를 확대 조정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 완화	물 정기점검 실시시기 확대		영하여 1년에 3회 이상 실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	특별법 시행령 (‘15. 1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② 안전진단 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	○ 중급기술자 ‘기사’ 자 격 제한	○ ‘기사’자격 삭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1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③ 안전진단 전문기관 장비보유 등록기준 완화	○ ‘비디오카메라’ 보유	○ ‘비디오카메라’ 삭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5. 1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16. 입지규제최소구역 통한 도시내 용·복합 개발 촉진	○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허용용도, 밀도(건폐 율, 용적률) 등 건축제 한 적용	○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일률적인 용 도지역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지 역맞춤형 도시계획 허용 -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주거· 산업·사회문화·관광·업무판 매 등 3개 이상 중심기능을 포 함한 계획수립 - 구역내 계획을 통하여 용도, 건 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입지규 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1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17. 도시계획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 공공청사, 학교, 문 화·체육시설의 편익	○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 의 편익시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편의시설 확대		시설 - 주차장 · 휴게소 · 공중전화 · 구내매점 등 ○ 자동차정류장 편의시설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생시설(휴게음식점 · 마을회관), 제2종 근생시설(극장 등, 직업훈련소, 테니스장 등), 도서관,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어린이회관 ○ 자동차정류장 편의시설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교육원, 직업훈련소,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4. 12월) 국도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6)
18.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① 분양 오피스텔 분양 신고 기준 완화	○ 20호실 이상	○ 30호실 이상으로 완화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2월)
				국도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② 분양건축물 수의계약 요건완화	○ 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면적이 일정요건에 미달될 경우 2차 공개모집 후 수의계약 가능	○ 최초 공개모집후 발생하는 미분양 물량은 바로 수의계약 가능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2월)
				국도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③ 분양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표시 전용면적 산정방법 일원화	○ 중심선 치수	○ 안목치수 적용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2월)
				국도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19. 자동차 대체부품인증 시행		○ 없음	○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인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	(‘14.12) 국토교통부자동차 운영과 (044-201-3853)
20.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후유장애시 최대 1억원, 부상시 2천만원, 대물피해시 1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후유장애시 최대 1억5천만원, 부상시 3천만원, 대물피해시 2천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16. 4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8)
21.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5.1.8)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0)
22.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운영 (동편 전용출국통로, 오전 8~10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 확대 운영 (동·서편 전용출국통로, 7~20시) 	’15. 1/4분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6)
23. 항공장에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이나 메일 등을 통하여 항공장에 표시등 설치 신고서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을 통하여 항공장에 표시등 설치신고서를 제출가능 	항공법 시행령 (‘15. 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5)
24.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등화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항공등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등화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항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6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설과 공항전력시설에 대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	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	점검지침 (‘15. 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5)
25. 항공장에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등 설치신고서 제출 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성적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등 설치신고서 제출 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광도 및 광학 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성적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섬광등의 경우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 	항공장에 표시등과 항공장에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15. 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5)
26. 접도구역 규제 완화	고속도로의 접도 구역 폭 20m 군도 및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접도구역 지정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10m로 축소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접도구역 지정 제외 군도 접도구역 지정 제외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의 신축 기준 완화(연면적 20㎡→30㎡)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	도로법 (‘14.12월)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0)
27.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양도·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목적 불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1월말부터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판매 관련 법령 개정 후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도 자유로운 판매 가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5.10월)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33)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8. 서수원 -평택 민자고속 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하	① 통행료 인하	◦ 1000원 ~ 3,100원	◦ 900원 ~ 2,700원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898)
	② 통행료 인상 주기	◦ 매년	◦ 3년(7.37%, 연평균 2.4%로 제한)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898)
	③ MRG	◦ 적용	◦ 폐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898)
29. 긴급견인		◦ 민자구간 미적용	◦ 적용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무료긴급견인서비스,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902)
기상청				
1.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	◦ 기상인력기준 2명	◦ 기상인력기준 1명		기상산업 진흥법
				기상산업 정책과
2. 기상용 슈퍼컴퓨터 신규 도입	◦ 슈퍼컴퓨터 3호기 운영	◦ 슈퍼컴퓨터 3호기, 4호기(우리) 운영 ◦ 세계기상분야 슈퍼컴퓨팅 성능 향상 - 758TF → 1,205TF(2014년 8위 → 5위) ☞ (참고)기상청홈페이지>행정과정책>보도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상청 슈퍼컴퓨터운영과 (043-711-023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료)기상용 슈퍼컴퓨터(4호기) 낙찰예정사 선정	
3.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 대상 해수욕장 확대	○ 해운대, 양양, 중문 해수욕장 예측정보 제공	○ 대천해수욕장(충남 보령) 확대 (총 4개소)	이안류 예보지원 서비스 실시 ('11. 7월)
			기상청 해양기상과 (02-2181-0742)
4. 지진조기경보 1단계 시행	지진속보 120초 지진통보 300초 통보	○ 지진조기경보 시행으로 50초 이내 지진분석 정보 전파 ○ 지진발생 여부만을 알리는 지진 속보에서 지진의 발생위치, 크기 등의 분석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공 ☞ (참고) 기상청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지진관측법 제정공포	지진관측법 ('15. 1월)
			기상청 지진정책과 (02-2181-0768)
5.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예보 기간 연장	○ 초단기예보(3시간까지) ○ 단기예보(내일까지)	○ 초단기예보(4시간까지) ○ 단기예보(모레까지) ☞ (참고)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동네예보	예보업무규정 ('15. 3월)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508)
6. 총자외선 지수 대국민 서비스	○ 자외선 B 영역의 자외선 지수 제공	○ 자외선 A와 B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 대국민 서비스 ☞ (참고)기후변화정보센터홈페이지(www.climate.go.kr) > 기후변화감시 > 자외선 지수	-
7.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 수도권 지역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 전국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으로 확대	
			기상청 기상융합 서비스팀 (02-2181-089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8. 온실가스 변화 경향 실시간 제공	연 1회 월평균과 연평균 농도 보고서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일, 일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웹페이지 제공 ☞ (참고)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mate.go.kr)에 제공 예정	기후변화감시센터 (041-674-6420)
보건복지부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 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 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면허신고제도 시행	의료기사등 에관한법률 (‘14.11.2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2-202-2452)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예방접종 13종 백 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예방접종 14종 백신 지원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타)보 도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15.5~)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9)
3.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에서만 무료접 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병·의 원에서도 무료접종 실시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타)보 도자료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15.10~)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21)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및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시범사업 (14년) 보건소에서만 잠복결 핵감염 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 대상 잠 복결핵감염 검진 민간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 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 확대 	결핵예방법 (‘15.7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043-719-73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수적이나 비용·효과 성이 낮아 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월) 청성뇌간이식술 등 5 항목 급여 확대 ◦ ('15.2월)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 장·뇌혈관 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 ('15.1, 2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6. 3대 비급여 개선	①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	병원별 80%	진료과목별 2/3 (약 65%)로 축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14.8.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의료기관정책과 (02-202-2744, 2479)
	② 상급종합 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	50% 이상	70%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9.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
	③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 운영	28개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 (참여 신청을 하는 병원 약 100 개 예상) 	'15.1.1일~ 지속 시행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24)
	7.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75세 이상 건강보험 지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7월) 70세 이상 대하여 임 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 대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15.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8.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 희귀질환치료제 경제 성 평가를 거쳐 보험 등재됨	○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 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는 경 제성 평가를 생략하는 특례제도 신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 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 장 공고) (’15. 3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3)
9.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전면금연 (예 :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		○ 100㎡이상 전면금연구역 운영(2014년부터)	○ 모든영업소(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15. 1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4)
10.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기초 생활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수준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수준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수준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준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5.6월, 잠정)
		○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수준 -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 (의료·교육급여) 현행과 동일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3052)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노인·장애인 등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64만원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취약가구 413만원, 그 외 290만원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② 2015년 최저생계 비 2.3% 인상	○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630,820원	○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668,329원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5.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3056)
11. 갑작 스런 위기가구 를 신속히 지원할 긴급 복지지원 확대	① (긴급 복지) 금융재산 기준 완화	○ 3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금융재산기준」일부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15. 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② (긴급 복지) 지원단가 인상	○ 4인기준 생계지원 월 108만원 등	○ 4인기준 생계지원 월 110만원 등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긴급지원 지원단가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15. 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③ (긴급 복지) 위기상황 으로 인정하는 사유 확대	○ 실직, 휴·폐업 인정 시 6개월 경과규정 ○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 우 가족이 없거나 관 계단절	○ 실직, 휴·폐업 인정 시 12개월 경과규정 ○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가족구 성원이 모두 취약계층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위기상황으로 인정 하는 사유」일부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15. 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2.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움카드 사용 시 각각의 신용카드 발급 해서 사용 - 최대 4개의 카드 발급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 맘편한, 아이행복(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움카드) 기능 사용 가능 - 다수의 신용카드 발급 불필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15. 4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044-202-3204)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 지원 	- ('15.2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8)
14.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신청 및 등급심사를 거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상이등급자(9천여명)는 등록절차 간소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5. 5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8)
15.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등급 1급부터 3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6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1)
16. 장애수당 급여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4만원 	'15.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044-202-332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확대		◦ 장애등급 1급 ~ 2급	◦ 장애등급 1급부터 6급	'15.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18.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만 14세가 될 때까지	◦ “만 15세가 될 때까지”로 확대	입양특례법 (’12. 8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044-202-3413)
19. 단기가사서비스 지원강화		◦ (질환) 골절, 중증질환 ◦ (신청기한) 최근 2개월 이내 ◦ (대상자 수) 5천명	◦ (질환) 골절(관절증, 척추증 포 함), 중증질환 ◦ (신청기한) 골절 및 수술일자로 부터 2개월(단, 입원으로 2개월 도과시에는 퇴원일자로부터 1개 월이내 신청가능) ◦ (대상자 수) 7천명	'15.2월~
				노인정책과 (044-202-3453)
20.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강화	① 독거노인 돌봄	◦ 기본돌봄서비스 : 20 만명 ◦ 응급안전서비스 : 8.1 만명 ◦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60개소 ◦ 사랑잇기 : 4.6만명	◦ 기본돌봄 : 22만명 ◦ 응급안전 : 9만명 ◦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80개소 ◦ 사랑잇기 : 5.4만명 등	'15.1월~
	② 학대 피해노인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 : 27개소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 : 29개소 ◦ 전문보호상담인력 추가 배치가능	'15.상반기
	③ 실명예방 지원	◦ 안검진 단가 : 36,250원 ◦ 개안 수술비 지원 : 2,440안	◦ 안검진 단가 : 43,000원 ◦ 개안 수술비 지원 : 5,000안	'15.1월~
				노인정책과 (044-202-346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④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저소득노인 약1,900명 ○ 예산 : 20억원 	노인정책과 (044-202-3463)
21. 노인 사회활동지원		○ (사업명칭) 노인일자리	○ (사업명칭) 노인사회활동지원	'15.1월~
		○ (사업규모) 28만명* *재능나눔 시범사업 3만 명 별도	○ (사업규모) 33.7만명	
		○ (재능나눔 활동기간) 3 개월	○ (재능나눔 활동기간) 6개월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044-202-3472)
		○ (전담인력 인건비) 월 109만원(1,823명)	○ (전담인력 인건비) 월116.7만원 (1,929명)	
2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주기 2년 ○ 식품위생관리 관련 평 가지표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주기 변경, 평가지표 신설 및 강화, 평가 결과 하위기관의 질관리를 위해 수시 평가 실시 등 	장기요양기관평가 방법등에 관한 고시 (’15.1~)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 3511)
23. 보육료·유아 학비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 보육료는 아이사랑카 드, 유아학비는 아이즐 거운카드로 지원	○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가능	영유아보육법 (’15. 1월)
		○ 아이사랑카드는 3개사 (KB국민,우리,하나)에서 발급하고 유아학비는 NH농협에서만 발급	○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 농협, BC, 롯데 7개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가능 <small>(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small>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9)
2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따른 혜택 없음	○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 납하는 경우 기업의 근로자 자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입주민이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입주민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가능 <small>☞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현행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small>	('15. 1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044-202-3545, 3579)
25.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성격으로 전국 98개소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230개소) 하여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 	영유아보육법 ('14.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1)
26.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 2세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15만원 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 겸직원장 지원비 : 월 7.5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 2세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17만원 지원(2만원 인상) 	- ('15.1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 3564)
27. 실업크레딧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유예 신청 (가입기간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급여 수급기간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가입기간으로 산입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최대 1년) - (대상자) 구직급여 수급자 - (인정소득) 실직 전 소득의 50%(최대 70만원) -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75% 	국민연금법 ('15.7월, 현상임위통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28.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소득기준 : 135만원 미만 - 10인 미만 영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소득 기준 확대 : 135만원 → 140만원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개정('14.1월) 시행('15.1월)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지원 ○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 : 85만원 - 85만원 이하 : 보험료의 1/2 지원 - 85만원 초과 : 월 38,250원 지원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지원 ○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 상향 : 85만원 → 91만원 - 91만원 이하 : 보험료의 1/2 지원 - 91만원 초과 : 월 40,950원 지원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29. 기초연금선정 기준액 상향조정	○ (선정기준액) 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 (지급액) 최대 20만원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20만원 ** 부부수급자 16~32만원	○ (선정기준액)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15.1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지급액) 최대 20만 3,600원('15.4월,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예정)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만 1,800원 ~ 20만 3,600원 ** 부부수급자 16만 2,880원 ~ 32만 5,760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5.1월, 4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28)
여성가족부			
1.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 여성발전기본법 ○ (추진체계)여성정책조정위원회, 여성책임관 ○ (보호범위)모성권 ○ (행사)여성주간	○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추진체계)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책임관 ○ (보호범위)부성권까지 확대 ○ (행사)양성평등주간 ○ 양성평등실태조사 실시	양성평등기본법 ('15.7.1)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149)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센터)140개소,	○ (센터)150개소	'15.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인프라 및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630개, 14,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720개, 15,800명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4)
3.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 기관으로 안전센터 신 규 설치 	'15.4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5)
4. 학교 밖 청소년지원 정책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청소년복지지원 법 제17조 *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 (프로그램) 직업체험(두 드림), 학업복귀(해밀) ◦ (전달체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5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 한 법률 ◦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 (전달체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00개) ◦ (기타) 학교장 연계 의무화 실태조사 실시·공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14.5.29)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8)
5.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연중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8월 설립 ◦ 하반기 시범운영(1~3 주과정, 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확대 운영(1~5주과정, 13회) 	'15.1월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02-2100-6302)
6. 청소년증 발급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청소년 본인 ◦ (신청장소)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가까운 읍·면·동 주 민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15.1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41)
7.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최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직접 또는 변 호사 등을 통해 양육 비 관련 소송을 건건 이 개별적으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이행관리원(3월말 설립 예정)에 한 번만 신청하면 자녀 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관 련 상담, 당사자간 합의 지원, 소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3.2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송 등 법률지원, 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p>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뉴스·소식> 보도자료>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강화제도 마련</p>	<p>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33~5)</p>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만12세미만 아동대상)	◦ 월 7만원/인 지원	◦ 월 10만원/인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15.1.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5)
9.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실시	◦ 6개 센터 시범사업	◦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15.1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02-2100-6368)
10.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 스톱지원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해바라기센터로 명칭 일원화	사업 지침 (2015.1.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2/6385)
11.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시설 신규 지원	◦ 총 보호시설 27개소	◦ 총 보호시설 29개소로 확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1분기)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5)
12. 성매매 방지 내실화	◦ 신설	◦ 1년 중 1주일을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19~9.25)으로 지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개소 	<p>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개소 추가(총 10개소) 	<p>관한 법률 (15.1분기)</p> <p>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6398)</p>
13.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보호시설 18개소 주거지원시설 199호 신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38백만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보호시설 21개소로 확대 주거지원시설 239호로 확대 1366 여성긴급전화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확보(18명 신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확대 631백만원 가정폭력 시설 종사자 치유프로그램 신규지원 40백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2분기)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100-6425)
14.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횟수)2,500회 (지역)전국 10개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횟수)3,500회 (지역)전국 15개 시·도 	'15.1월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2)
1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안정지원금 월 101만2천원 간병비 월 32만8천원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지원금 연 359만4천원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안정지원금 월 104만3천원으로 인상 간병비 월 45만4천원으로 인상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지원금 연 427만원으로 인상 맞춤형 지원 국제학생작품공모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5.1월)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100-643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법무부			
1.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 의무 도입 및 대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 명시 의무 ○ 1개월	○ 설명 의무 ○ 3개월로 연장	상법 보험편 (’15.3.12.)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2.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 전면 금지	○ 일부 허용	상법 보험편 (’15.3.12.)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3. 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 규정 없음	○ 보험대리상 및 보험설계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고, 그 효 력이 보험회사에게 미치게 함	상법 보험편 (’15.3.12.)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4. 피보험자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제한	○ 규정 없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 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실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보 험자가 그 가족에 대하여 대위권 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 보험금청구권 : 2년 ○ 보험료청구권 : 1년	○ 보험금청구권 : 3년 ○ 보험료청구권 : 2년	상법 보험편 (’15.3.12.)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6. 단체생명보험의 수익자는 가족으로		◦ 규정 없음	◦ 단체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면 이를 명시한 규약이나 개별 서면동의가 필요	상법 보험편 (‘15.3.12.)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7. 회생 절차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 방지		◦ 회생절차에서 M&A가 시도되는 경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규정 없음	◦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으로 회생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고, 인수자가 구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함 ☞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회생절차 악용방지를 위한 도산법 2015. 1. 16. 시행 예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1. 16.)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8. 중소 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 채무관계가 단순한 중소기업도 일반회생절차를 이용	◦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의 재량화(회생절차기간 약 3개월 단축) ◦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 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조사위원 선임비용 약 2000만원 절약) ☞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을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3월)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9.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의지대로	① 공익 신탁 설립 요건 완화	◦ 허가제	◦ 인가제로 완화	공익신탁법 (‘15.3.19)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② 공익 신탁 담당부처 일원화	◦ 주무부처	◦ 법무부로 일원화	공익신탁법 (‘15.3.19)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사법무과 (02-2110-3167)
	③ 공익 신탁 인가절차 구체화· 서식마련	◦ 규정 없음	◦ 공익신탁 인가절차 구체화 ◦ 인가신청서 등 서식 마련	공익신탁법 시행령 (‘15.3.19)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15.3.19)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④ 공익 신탁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 규정 없음	◦ 공시제도 도입 ◦ 일정규모 이상 공익신탁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화	공익신탁법 (‘15.3.19)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⑤ 공익 신탁의 약용방지 를 위한 제도 도입	◦ 규정 없음	◦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공익신탁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 산은 국가, 지자체나 유사한 목 적의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도 록 함	공익신탁법 (‘15.3.19)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10.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 466개 마을 733명 마 을변호사	◦ 전국 1,412개 모든 읍·면 1,455명 마을변호사로 확대 ☞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우리 마을에 ‘변호사’가 생겼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법무부 법무과 (02-2110-3170)
교육부				
1.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 시행		◦ 이전 교복 구매 형태 : 개별구매, 공동구매,	◦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 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괄구매	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됨 -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음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교복 학교주관 구매 시행 및 '교복구매 운영요령(2014년 개정)' 안내	교육부 학생복지 정책과 (044-203-6522)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5,210원	◦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2014-29호) (15.1.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29/7535)
2.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제 도입	◦ 없음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50만원 지급 ☞ (신고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게시예정>	국가기술자격법시 행규칙 (15.1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평가과 (044-202-7290)
3.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 확대	◦ 현 고교 졸업생(최종학 기 현장 실습생 포함)	◦ 고교 재학생 단계로 확대 시범운영 -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참여 특성화고 9개교 재학생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과 (044-202-7273)
4. 직업훈련 선택권 및	◦ 직업훈련 참여자 간	◦ 구직자도 (40시간 이상) 사업주	실업자 등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훈련비 지원 확대	타 훈련 참여 불가능 - 계좌한도(200만원)내 훈련비 지원	훈련 참여 가능 - 동일 직종 취업 시 훈련비 전액 지원	직업능력능력 개발실시규정 (‘15.1)
			고용노동부인적 자원 개발과 (044-202- 7319)
5.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훈련 참여 불가능 - 실업자훈련 간 참여방 식 이원화	○ 초단시간 근로자, 택배기사 등 실업자 훈련 참여 가능 - 실업자훈련 참여방식을 ‘내일배 움카드’로 일원화	실업자 등 직업능력능력 개발실시규정 (‘15.1)
			고용노동부인적 자원 개발과 (044-202- 7319)
6.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부터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가 가능 ○ (채용일정·결과 등의 공지) 구 인업체는 채용서류, 채용일정, 채용여부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알려줘야 함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 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 출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할 수 없음 <p>※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 우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 인을 받아 채용심사비용의 일 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p>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해명자 료>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채용서류 돌려 받을 수 있어</p>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15. 1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과 (044-202-733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확대 - 종전: 월보수 135만원 미만 - 개선: 월보수 140만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대상자 범위를 월보수 135만원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개정 	보험료징수법 하위 고시 개정 ('15.1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48)
8.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졸 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속한 경우 연 100만원 장려금 지급(최대 3년)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15.4)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48)
9. K-Move 센터 설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국 *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국으로 확대 * 호주, 싱가포르 추가 설치 (1개국 미정) 	2015.3.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8)
10.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 -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 (지원수준) - 인건비의 50%를 1년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으로 요건 현실화 (지원수준) 중소기업에 한해 인건비 외에 간접노무비 1년간 추가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 ('15.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단 (044-202-7502)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를 지원 - (전환장려금) 전환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지급한 임금 및 그 밖의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원(중소·중견기업만) - (대체인력지원금) 전환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시행지침 (‘15. 1월)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단 (044-202-7505)
	-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 (‘15. 1월)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단 (044-202-7505)
11.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 근로자지원 : - 연간 5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	○ 근로자지원 : 상동 ○ 사업주지원(신설) :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최대 1년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시 (‘15. 1월)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9, 7462)
1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14년말 종료 ○ 경비업종 지원기준율(23%)	○ ‘15년 ~ ‘17년말까지 지원기간 연장 ○ 경비업종 지원기준율(12%) ○ 정년요건 완화(사업개시 이후 정년 미설정 → 신청 현재 정년 미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시 (‘15.1월)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사업개시 후 정년 미설정	설정)	(044-202-7459, 7462)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무기계약 전환시, 첫 6개월간 월30만원 이후 6개월 월30만원 지원	◦ '15.1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채고용) 지원 수준 조정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첫 6개월간 월 40만원/ 이후 6개월 월 80만원 으로 상향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책마당>대 상자별정책(여성)>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시 (2015.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8)
14.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변경 및 '15년 부담기초액 확정	◦ 장애인 고용부담금, 미달인원 구간별 차등 부과	◦ 미달인원 전체 일괄부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장애인 고용 부 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시 ('15. 1월)
	◦ 부담기초액 월 67만원 ◦ 미달인원 구간별 차등 부과 ◦ 가산구간 4단계	◦ 월 71만원 ◦ 미달인원 전체를 하나의 부담기 초액으로 일괄부과 ◦ 가산구간 5단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1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확대	◦ 건설현장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 2015.1.1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 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 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 명 이상인 공사현장은 보건관리 자를 선임하여 보건관리자의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5 ('15.1.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 7742)
인사혁신처			
1. 지방인재	Ⅰ 대상 ◦ 5급 공채, 외교관후보 자 선발시험	◦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7급 공채(이에 상당하는 외무공	공무원임용 시령,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채용 목표제 7급 공무원 공채시험 까지 확대			무원 공채 포함)	균형인사지침 (’15. 1)
	② 시험실시 단위별 채용목표 인원	○ 시험실시단계별로 당 초합격예정 인원의 20%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합격예정 인원의 20% ○ (7급 공채 및 이에 상당하는 외 무공무원 공채시험)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합격예정 인원의 30%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2-2100- 6613)
	③ 추가합격 상한	○ 목표인원에 미달하더 라도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 제1차시험에서는 추 가합격상한(10%) 의 제한을 두지 않음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추가합 격은 당초합격예정인원의 10% -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상한 (10%)의 제한을 두지 않음 ○ (7급 공채 및 이에 상당하는 외 무공무원 공채시험) 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합격은 당초합격예정인원의 5%	
	④ 추가 합격선	○ 1차 : -3점, 2차 : -2점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1차 -3점, 2차 -2점 ○ (7급 공채 및 이에 상당하는 외 무 공무원 공채시험) 필기 -2점	
행정자치부				
1. 재외 국민에 대한	㉠ 국외 이주자의 주민등록	○ 주민등록 말소	○ 주민등록 유지 (거주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법 (’15.1.22)
				행정자치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 증 발급가능	(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주민과 (02-2100-3983)
	② 재외 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자)	◦ 주민등록 말소	◦ 주민등록 허용 (말소자 → 재외국민으로 재등록) (미등록자 → 재외국민으로 신규 등록)	주민등록법 (‘15.1.22)
				행정자치부 주민과 (02-2100-3983)
	③ 재외 국민 영주귀국 자의 주민등록 (해외이주 포기자)	◦ 주민으로 등록	◦ 주민등록 변경 (재외국민 → 거주자)	주민등록법 (‘15.1.22)
				행정자치부 주민과 (02-2100-3983)

경찰청

1. 경비 산업 활성 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규제 완화· 폐지	①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 시간 완화	◦ 28시간	◦ 24시간으로 완화 ☞ 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경 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알림	경비업법 시행규칙 (‘14. 12월)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1331)
	② 경비업 변경신고 기간 완화	◦ 15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로 완화 ☞ 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경 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알림	경비업법 시행령 (‘14. 12월)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1331)
	③ 경비 협 회 설립제한 규정 폐지	◦ 발기인 5인 이상	◦ 발기인 제한 규정 폐지 ☞ 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경 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알림	경비업법 시행령 (‘14. 12월)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13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 최종별로 구분, 다양한 기능에서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담당	○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실종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계 마련 ○ 분야별 특화된 수사 전문성 및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 여성·아동 등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보호와 지원 전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3150-1391)
3.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인상	○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15년 이상 30년 미만 경장, 30년 이상 경사급 보수	○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30년 이상 경위급 보수 ☞(참고) 청원경찰법 제6조	청원경찰법 ('14. 12월)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756)
국가보훈처			
1.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손자녀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 '45.8.15. 이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 미지급 ○ 나이 많은 자에 지급	○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1명에 한하여 보상금 지급 ○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독립유공자예우법·시행령 ('15. 1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11)
2.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 신설	○ 독거이며 3개 이상 질환이 있는 생계곤란 참전유공자에게 보훈 섬김이가 주3회 방문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 복지인력 충원(243명) - 보훈복지사 17명 - 보훈섬김이 226명	2015년도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20)
3. 남양주보훈요양원 개원	○ 5개 보훈요양원 (수원·광주·김해·	○ 남양주보훈요양원 개원 - '15. 1.19부터 입소개시,	국가보훈처복지운영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구·대전)	'15. 2월 개원 ☎ (참고) http:// nyjcare.bohun.or.kr	(044-202-5631)
4. 남방한계선 인접지원에서 복무한 군인 등의 고엽제환자 인정기간 확대	◦ 1967.10.9 ~1970.7.31	◦ 1967.10.9~ 1972.1.31 로 확대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정보마당>법 령정보>보훈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 (법사위계류중 공포즉시시행)
			국가보훈처제대군 인지원과 (044-202- 5759)
5. 복지카드 기능통합	◦ LPG복지카드와 고속 도로 통행카드 따로 발급	◦ LPG할인과 통행료 감면기능 통 합하여 하나의 카드로 발급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정보마당>법 령정보>보철용차량 지원지침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14.12.23)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61)
국방부			
1. 5급 공채 공무원의 중위 임관제도 보완	◦ 5급 공채공무원 중위 임관	◦ 외교관 후보자 선발 후 국립외교 원을 수료하여 5등급 외무공무원 으로 임용된 사람도 중위로 임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 군인사법>제12조 장교의 초임계 급 등	군인사법 (‘15. 4.1, 잠정)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2.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선발대상 확대	◦ 군사적인 능력과 전 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연 2회 선발하여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	◦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 역 재임용 선발대상을 대위~중 위, 중사로 확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군인 사법>제11조 장교의 임용 등	군인사법 (‘14. 1. 11)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 진급·전역 시 범죄경력조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급 및 전역 시 민간 법원에서 처벌받은 경력조회를 위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경력을 진급 및 전역 심사시 조회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 <p><small>(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군인사법시행령>제6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small></p>	군인사법시행령 (‘14. 7. 18.)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4.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군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채용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급·7급 : 20~40세 9급 : 18~40세 - 특별채용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6·7급 : 53세 4·5·8·9급 : 45세 기능군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채용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6~9급 : 18~40세 - 특별채용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6~9급 : 4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군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 18세 이상 기능군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 6급 이하 : 18세 이상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15. 1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05)
5.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기준 : 상담관련 자격증과 상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채용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자격기준 변경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10년 이상의 군 복무경험자에 한해 상담경험을 인정) 	군인사법 시행령 (‘14. 11월)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4)
6.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훈련 소집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 부과와 상관없이 원하는 일정에 훈련 휴일/전국 단위 훈련 신청 가능 향방작계훈련은 1차 보충훈련부터 휴일훈련 신청 가능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15. 1월)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일반 예비군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 09:30까지 입소 허용	○ 소집 통지 시간인 09:00까지만 입소 허용 ☞ (참고) 예비군 홈페이지>공지사항>15년 달라지는 예비군훈련 제도 안내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15. 1월)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8. 일반 예비군훈련 시 M16소총 사용	○ 일반훈련 시 칼빈소총 사용	○ 일반훈련시 M16 사용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15. 1.1)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9. 병 봉급 인상(15%)	○ 병 봉급 이병 112,500원 일병 121,700원 상병 134,600원 병장 149,000원	○ 병 봉급 인상(15%) 이병 129,400원(증 16,900원) 일병 140,000원(증 18,300원) 상병 154,800원(증 20,200원) 병장 171,400원(증 22,400원)	공무원보수규정 (‘15. 1.1)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10.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 강화	○ 병 사망위로금 인상 • 5백만원 지급	• 1천5백만원으로 인상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15. 1월)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21)
	○ 병 상해보험금 지급 신설	○ 1억원 지급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15. 1월)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1. 장병 전투임무 수행 및 복무여건 향상을 위한 보급품 지원 확대	① 핵심 개인장구류 집중 보급	◦ 노후 및 부족물자 위주의 보급	◦ 핵심 개인장구류를 하나로 묶어서 부대 단위로 집중 보급하여 완결 - 2015년까지 전방 GOP사단 전투부대 100% 신형 보급	-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99)
	② 동운동복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입대시 초도 1매 지급	◦ 입대시 초도 2매 지급	-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99)
	③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확대	◦ 개인일용품 중 현금지급 품목 : 세숫비누, 세탁비누, 치약, 칫솔	◦ 개인일용품 보충보급품 전 품목 현금지급 - 추가품목 : 휴지, 가루비누, 면도날, 구두약	-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99)
	12.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신설 *피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 경과로 법적보상 근거 없음	◦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법적근거 마련 ⁶³⁸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국방부 관계법령(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 4. 16.)
				국방부 시설기획과 (02-748-5859)
13.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	◦ 신설		◦ 군인·군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하여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군인사법 ('14. 12.), 군무원인사법 ('15. 4.)
				국방부 법무과 (02-748-681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위사업청				
1.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시 SW 국산화 평가 배점 :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기술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시 SW 국산화 항목/ 배점 반영 시행 : SW 중심사업 2점, 일반 핵심기술 1점○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시 SW 국산화 평가 배점 : 3점 * 상용SW 국산화 평가항목 추가 <p>☞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행정규칙>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p>	<div>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15. 1월)</div> <div>방위사업청 획득기반과 (02-2079-6377)</div>
2. 저가낙찰 방지 및 기술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 평가 시 비용평가 최고점 부여 제안비율 :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 평가 시 비용평가 최고점 제안비율 상향 조정 : 80% → 90% <p>☞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행정규칙>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p>	<div>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15. 1월)</div> <div>방위사업청 사업운영평가팀 (02-2079-5032)</div>
3.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재도전 기회 제공 및 지원대상 확대	Ⅰ 성실실패 재도전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실실패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재도전 기회(최대 2년) 제공 <p>☞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p>	<div>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14. 12월)</div> <div>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2)</div>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②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대상 확대	○ 양산 및 운영 유지 중인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 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까지 확대 * 단, 국산화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부품은 제외 ○ 소재, 소프트웨어도 지원대상으 로 확대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 법령>행정규칙>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 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14. 12월)
4.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적용		○ 신 설	○ 유해물질 안전관리 필요품목 지 정권자(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 모총장) 명시 ○ 유해물질 안전 관련 품질보증 적 용기준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 구서에 정하여 적용 ○ 유해물질 안전 관련 품질 검사를 거쳐 합격된 제품에 국가통합인 증마크(KC) 표시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 법령>방위사업법령>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15. 3월)
				방위사업청 물자규격팀 (02-2079- 4690)
병무청				
1.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입영선호시기(2~5월) 전산추첨에 의한 선발, 기타시기(6~12월) 선착순에 의한 선발	○ 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 구분, 2개(1·2지망) 선택 후 추첨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뉴스마당> 공지 사항	지침 (2015년 2월 입영자부터)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 2733)
2. 306보충대 해체후, 사단직접 입영		○ 306보충대 입영 후 관할 사단으로 배치	○ ‘14년말 306보충대 해체 후, ’15년부터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입영	지침 (2015년 1월 입영자부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3)
3.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 없음	◦ 면접·체력검사 등 현역병 모집 전형참석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 ※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 산 범위 내에서 응시횟수 통 틀어 2회까지 확대	병역법 (‘15. 1월 전형참석자 부터)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42)
4.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 성적(고교내신, 수능 등) 평가 요소 반영	◦ 성적 반영 축소 및 각 군 반영비 율 동일 적용하도록 모집병 선발 평가요소 개선 - 다만, 기술 중심의 지원병의 경 우 성적 반영을 폐지하고, 자 격·면허, 전공 위주로 선발 (‘16. 1월 입영자부터)	지침 (‘15. 1월 입영자 부터)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53)
5.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 없음	◦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규정 (‘15. 1월 입영자 부터)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49)
6. 사회복무요원 병가 미사용자 연가 가산	◦ 연가 : 31일 이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복 무의무 위반사실이 없이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가산 -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 2일 -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 1일	병역법 시행령 (2014.11.10)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042-481-301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 1년이상 근무해야 다른 업체로 전직 가능	○ 6개월만 근무해도 다른 업체로 전직 가능	병역법 시행령 (2014.11.10.부터)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 2773)
문화 · 체육관광부				
1.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부재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 로그램 신규 지원 ☞ (참고)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문 화예술교육과 (044-203- 2764)
2. 안전 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환경 조성	① 체육 시설 안전 기준 개선	○ 화재 대비 피난안내의 무 없음 ○ 체육시설 내 사고 발 생 시 보고 의무 없음	○ 화재 대비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 안내 ○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② 스키장 안전기준 개선	○ 안전망, 안전매트의 구체적인 기준 없음 ○ 길이 1.5km 이상 슬로 프에 스키구조요원 배 치 : 2명 ○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1명	○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 상(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 되도록 설치, 안전매트의 두께는 50mm이상 ○ 길이 1.5km 이상 슬로프에 스키 구조요원 배치 : 3명 ○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2명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③수영장 안전·위 생 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도기준 : 2.8NTU ○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도기준 : 1.5NTU ○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비소 0.05mg/l이하, 수은 0.007mg/l 이하, 알루미늄 0.5mg/l 이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3.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모태펀드에 스포츠계정을 신설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4.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콘텐츠 공모, 태권도 관광자원화 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044-203-3165)
5. 창조관광사업 개편 및 창조관광육성펀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4백만 원으로 확대 개편 - 2단계 맞춤형 지원 및 창조관광사업 지정 * 참신하고 혁신적인 중소 관광사업체는 누구라도 지원 가능 - 창조관광육성펀드 도입(관광기금 130억 원) (참고)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공모전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 : 추후 개편 예정	관광진흥개발기금 법, 고시('15.1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16)
6. 장애물 없는 관광지 「2015 열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관광지 및 관광사업장 5개소 선정/ 개소 당 2억원 한도 내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관광지」사업		에서 장애물 없는 환경 개선 지원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사업 공고일 부터 확인 가능	관광정책과 (044-203-2816)
7. 호텔 등급 평가방식 및 표시체계 개편	○ 단일 평가기준 ○ 등급평가기관 이원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무궁화 문양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호텔 등급별 수준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 암행평가 (5성급, 4성급), 불시평가 (3성급, 2성급, 1성급) 도입 ○ 등급평가기관 일원화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 ○ 별 모양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1성급) ※별 갯수가 많은 쪽이 높음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15. 1월)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4)
8. 관광사업으로 일반야영장업 신설	○ 관광사업에 미포함	○ 입지·규모 등을 등록기준에 적 합하도록 하여 야영장이 소재하 고 있는 시·군·구에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15. 1월)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41)
문화재청			
1. 궁·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	○ 지역주민 혜택 부재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 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관 람료 50% 감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훈령 (‘15.1.2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새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공·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50% 감면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042-481-4909)
방송통신위원회			
1. EBS 지상파 다채널 방송 시범서비스	지상파 방송사별 1개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가구는 EBS 채널 1개 추가 시청 가능 ☞ (참고) 방통위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방통위, EBS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허용키로’ 	방송법 및 전파법 (’15. 1월)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5)
2.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통사(알뜰폰 포함)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음란물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법령현황 	전기통신사업법 (’15. 4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윤리과 (02-2110-1553)
3.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하드·P2P 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법령현황 	전기통신사업법 (’15.4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윤리과 (02-2110-1553)
4.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실시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광고 제작비 50% 지원 - TV광고 5,000만원, 라디오광고 500만원 한도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광주, 인천 등 5개 지역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운영을 통해(전국 6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시청자에게 미디어교육, 방송제작장비 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방송법 제90조의2 방통위 시청자지원팀 (02-2110-1297)
미래창조과학부			
1. 조달청 종합쇼핑 몰 등록 소프트웨 분리 발주 의무화	① 분리 발주 대상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가인증 획득 조달청 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15. 1월)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02-2110-1837)
	② 제외 사유 적용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 자체 판단 조달 발주 사업의 경우, 제외사유 적용 시 사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사전 검토 의무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15. 1월)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02-2110-1837)
2.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확대 적용	①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SW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에 한시적 참여허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15. 1월)
	② 중소 기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5.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4541)
3. 공개SW R&D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 및 기술료 면제	① 공개SW 개발과제 대상 정부출연 금 면제	○ 총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 면제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공고 제 2014-501 ~ 505)정보통신·방송 연구 개발 사업 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안) 행 정예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부속훈령 (’15. 1월) 미래창조 과학부 SW진흥팀 (02-2110-1805)
	② 공개SW 개발과제 대상 기술료 면제	○ 지원된 정부 출연금의 10% 이상 납부	○ 면제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공고 제 2014-501 ~ 505)정보통신·방송 연구 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안) 행 정예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부속훈령 (’15. 1월) 미래창조 과학부 SW진흥팀 (02-2110-1805)
4. 사물 인터넷산 업 활성화 지원	① 사물 인터넷 분야 개방형 생태계 구축	-	- 개방형 IoT 플랫폼 개발 및 소스 공개로 사물인터넷 신제품 개발 촉진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신산업팀 (02-2110-1722)
	② 사물 인터넷 실증단지 조성	-	-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단과 사 물인터넷 실증센터 운영을 통한 서비스 발굴 및 실증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신산업팀 (02-2110-1722)
	③ 사물 인터넷 DIY 환경	IoT 혁신센터 개별 운영	- DIY오픈랩 확대 운영 : ‘14년 3개 소(강남, 용인, 송도)→’15년 지방 2개소 추가	- 미래창조과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확산		- 초등학생 대상 사물인터넷 DIY체험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경진대회 개최	인터넷산업팀 (02-2110-1722)
	④ IoT 혁신센터 운영	-	- 창조경제혁신센터, 무한상상실 등과 협력확대 및 IoT 혁신센터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산업팀 (02-2110-1722)
5.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① 간접비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 등급별 일괄적용 - A등급 20%, B등급 15%, C등급 10%, D등급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대학의 실소요 원가계산 방식으로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15. 4월 예정)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02-2110-2731)
	② 간접비 비율 가·감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R&D사업 참여제한의 기간 및 건수에 따라 최대 -2.8%p 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R&D사업 참여제한의 기간 및 건수에 따라 최대 -5.0%p 감율 연구비 관리수준에 따라 ±2.0%p 차등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15. 4월 예정)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02-2110-2731)
6. ICT 학점이수인턴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사업 - 고등교육법상 '현장실습'에 따른 학점인정 이외에 ICT 특별법에 따른 학점이수인턴제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년 2월 시행된 ICT 특별법 및 시행령 등에 반영된 「학점이수인턴제」를 추진 이에 따라 「ICT 학점이수인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부와 협의의 거쳐 '15년 1학기부터 추진할 계획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 ('14. 2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 기반과 (02-2110-285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안내,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참가 기업 및 대학을 선정하고, 기업에서 발굴한 R&D 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등의 과제를 대학측과 공유하여 수요 기반의 매칭을 지원○ 참여 기업, 인턴, 대학 등에 근무 환경 구축, 사전교육, 인턴 지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15년도 인턴 150여명을 목표로 추진 <p>☞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기업은 톡톡 튀는 인재를, 학생은 현장학습에 학점까지”</p>	
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p>☞ (참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처리외안>법률안>「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p>	정보통신 공사업법 (’15.3월에정)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8)
8.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최소화	① 발신 번호 변작방지 등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통신사 자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신번호 변작방지, 국제전화 안내 등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중지 <p>☞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전기통신사업법 (’15. 4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02-2110-1947)			
	②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만으로 사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등록요건* 완비) 후 사업 가능 <p>*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 기술적 조치 구현, 관련 인력 및 물적 시설 확보 등</p>	전기통신사업법 (’15. 10월)
				미래창조과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등록제 도입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신자원정책과 (02-2110-1947)
농림축산식품부				
1.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가등기 시행	○ 신규	○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 (기재예시) 동 재산은 보조금을 지 원받아 취득한 것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월, 잠정)	
			농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 (044-201-1382)	
2. 농업법인의 경영활동 지원 강화	□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 농업경영, 농산물 가공· 유통, 농작업 대행 등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 임범위 ○ 무한연대 책임 □ 영농조합법인 조직변경 유형 ○ 합명·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범위 추가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 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 농원사업 ○ 출자액 한도 ○ 유한·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으로도 변경 가능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14.12 공포, 잠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월, 잠정)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7)	
3.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행	○ 신규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 트 시행 - 3~4년간 최대 70억원(국비 기준)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지역발전위원회홈페이지>지역위 소식>보도자료>“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 책, 내년도 예산으로 구체화”	
4.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보험료 자부담 축소	◦ 자부담 50%	◦ 자부담 20%	-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2)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기준소득금액 85만원	◦ 기준소득금액 91만원 ☞ (참고) 농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15. 1월)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6.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 신규	◦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 시범사업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 식>보도자료>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농어업재해 보험법 (‘15. 6월)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044-201-1780)
7. 밭농업직불제 확대	◦ 신규 ◦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 40만원/ha	◦ 밭고정직불제 도입 - 지급액(모든 품목) : 25만원/ha * 기존 밭농업직불대상인 26개 품 목 : 15만원/ha 추가 지급 - 50만원/ha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 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밭농업직접지불 제사업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5.1월)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044-201-177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8. 쌀직불금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만원/ha 지급대상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원/ha - 1년이상 경작면적 1천㎡이상 또는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p>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5.1월)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044-201-1778)
9.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구입자금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축산경영종합자금 -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 농업경영회생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구입자금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축산경영종합자금 -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회생자금 <p>☞ (참고) 농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p>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5. 1월)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6)
10.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개 품목 종합위험보장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12개 시군) - 단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46개 품목 - 배(30개 시군) - 단감(12) - 사과(3)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 보험대상 품목 및 종합위험보장방식 확대</p>	농어업재해 보험법 시행령 ('15. 2월)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7)
11.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3만원/3.3㎡	3.5만원/3.3㎡	농지규모화사업시행지침 ('15.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 축산사업시행지침 > 농지규모화사업	농식품부 농지과 (044-201-1738)
12. 쌀 관세화 시행	○ 쌀 관세화 유예	○ 쌀 관세화 이행 - 수입가격의 513%만큼 관세를 납부하면 쌀 수입 가능 -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 상에 포함	「세계무역기구협 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관세법 시행령」 (2015.1.1)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2)
13. 쌀 부정유통 방지	○ 국산쌀-수입쌀 혼합 판매시 혼합비율 표시 ○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판매시 혼합비율 표시 ○ 양곡의 거짓·과대 표 시 및 광고시 처벌기준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 의 5배 이하 벌금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 식>보도자료>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수 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양곡관리법 (2015년 6월 또는 7월)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5, 1820)
14. 선박에 대한 아시아메미나방 검사수수료 한시적 인하폭 확대 운영	○ '14년도 20% 한시적 인하	○ 1년간('15년) 한시적 인하폭 25%로 확대 ☞ (참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정 부3.0정보공개>사전공표대상정보>이사회 개최 결과>제9차 임시이사회 결과 의안 번호 제2014-17호	-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5.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 600㎡ 초과 - 돼지 : 1,000㎡ 초과 - 닭 : 1,400㎡ 초과 - 오리 : 1,300㎡ 초과 * 15.2.22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대상 : 준전업규모까지 확대 - 소 : 600 ~ 300㎡ - 돼지 : 600 ~ 300㎡ - 닭 : 1,400 ~ 950㎡ - 오리 : 1,300 ~ 800㎡ * '15.2.23일~'16.2.22일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15.2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17)
1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관리 품목 - 소 및 쇠고기 (수입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돼지 및 돼지고기이력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4.12.28.)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62)
17.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 '15년 지원 규모 : 20개소 - 개소당 지원한도 : 6억원 (보조 3억원, 융자 3억원)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2)
18.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대상 축종 - 산란계,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대상 축종 추가 - 산란계, 돼지, 육계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14.12.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83)
19. 무허가 축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계·오리의 흙바닥에 사육 - 축사 미인정 ○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 신·증축시 축사거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계·오리의 흙바닥에 사육 -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을 도포 시 축사로 인정 ○ 한·육우, 말도 운동장 허용 ○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 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 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 *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 식>보도자료>무허가축사 개선대책</p>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 광장>법령정보>가축분뇨법</p>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 광장>입법예고>가축분뇨법 시행규칙</p>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5.3월 예정)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5)
20. 가축질병 발생 시 방역대 내 선별적 살처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 500m 또는 3km ○ 가금 및 알 - 전부 이동제한 ○ 이동 차량 - 전체 소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가 살처분 원칙 -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 가금 및 알 - AI 검사 후 음성인 경우 출하 가능 ○ 이동 차량 - 축산차량만 선별 소독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 식>보도자료>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p>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14. 12월)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1. 구제역 백신접종 기술비	○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접종 기술비 지원 -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9)
22.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가 요건 -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 확보 지정 요건 -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4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식재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가요건 - 폐지 지정 요건 -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14. 12월)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7)
23. 식품인력양성	○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인프라 구축 - 식품교육 수요조사·분석, 교육 프로그램 협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 식품기업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신직업 창업교육 및 NCS기반 대기업 교육프로그램, 대학생·수출형 중소기업 연수프로그램,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18)
24.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省)별·도시별 수출 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냉장·냉동 물류센터 이용 지원 	-
			농식품부 수출진흥팀 (044-201-217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현지화를 위한 상품화·마케팅·법률자문 온라인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p>☞ (참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p>	
25.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이용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앱으로 확대 (www.maglook.co.kr) SNS서비스 제공(카카오토리)(카카오토리ID : 농업관측센터)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26. 농업전망 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대회(서울) 및 영·호남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특성과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개최 - 1월 20일(중부권), 22일(호남권), 27일(영남권), 29일(충청권) 2월 3일(제주도) <p>☞ (참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관측정보 > 농업관측정보 > 농업전망</p>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27. 신재생에너지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지열냉난방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지원대상 면적 - 0.1~0.5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지열냉난방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 지중열냉난방시설 - 폐열재이용시설 지원대상 면적 : 0.1~1.0ha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p>	사업시행지침 (‘15. 1월)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8)
28. 농산물 우수관리(GAP)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신청 - 3차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신청(3→1차례), 인증 소요기간(126→42일), 구비서류(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선	○ 인증 소요기간 - 126일 ○ 구비서류 - 12종	→3종) ○ 인증신청 : 1차례 ○ 인증 소요기간 : 42일 ○ 구비서류 : 3종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 인증은 쉬워지고 안전성은 강화	칙 (14.9.30)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 2425)
29.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해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 천만원 이하 벌금	○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 시자에 대해 형사처벌 +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 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 금으로 부과· 징수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현행법령>농수산물의 원산 지 표시에 관한 법률(15.6.4. 예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5.6.4)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2419)
30.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연장	○ 유기 5년	○ 유기 5년 + 추가 3년* 지급 * (단가) 논 300천원/ha, 밭 600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 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친환경농업직접 지불사업시행지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15년, 잠정)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			
식품의약품안전처			
1.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 개방	○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상호 단절되어 식품안 전 문제 발생 시 효과	○ 12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되어 식품안전 일원화 행정지원 및 식 품안전정보의 공개·공유로 선 제적 식품안전 대응 체계 확립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 개방 (15. 4월)
식품의약품 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적 대응에 한계	☞ (참고) 식약처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본격 추진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구축추진단 (043-719-4064)
2.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도입	◦ 구분표시 제도 없음	◦ 식품용 기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의무화 ☞ (참고)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 「식품등의 표시기준」 ('13.12.26)	식품등의 표시기준 (‘15.1.1)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소비 안전과 (043-719-2861)
3. 현장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 영업자(대표자) 대상	◦ 업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 종사 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2015. 4월 예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정책 조정과 (043-719-2003)
산림청			
1. 산림탄소모아 시스템 운영	〈신설〉	◦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림탄소모아(산 림탄소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산 림탄소상쇄 사업계획 신청 ☞ (참고) 산림탄소모아 시스템 오픈시 접근 경로를 별도 공개예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15. 상반기)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99)
2.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규제 개선	◦ 연구개발비 사용 변경 한도 상향조정 등 집 행기준 개선	◦ 「국가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변경 승인한도인 3천만원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5백만원 이상의 장 비·시설비를 변경하 려는 경우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제출기간인 매년 2월말까지 제 출하게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국가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이상 사 용하도록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 브 확대 <p><small>☞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산림분야 연구개 발사업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small></p>	규정 (’15. 1/4분기)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 -4137)
	○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외 사용 금액 비율에 따라 최소 3년에서 10 년까지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개발규정」에 준하여 용도 외 사용금액 비율을 국가기 관 간 통일 - 20% 이하인 경우 : 5년 이내 → 3년 - 20% 이상 30% 이하 : 7년 이내 → 4년 - 30% 초과인 경우 : 10년 이내 → 5년 - 둘 이상 병합 : 10년 이내 → 5년 <p><small>☞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산림분야 연구개 발사업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small></p>	
3. 우드그랩 품셈 반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가꾸기 및 직영벌채 설계 시 우드그랩 품셈 반영 <p><small>☞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small></p>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15. 1월)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 -420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4.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화된 건조시설, 제재·가공 시설, 방부시설 등의 현대화 개선 지원 (30개소) <p>☞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15년도 목재생산 사업계획</p>	'15년 사업계획 ('15. 1월)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4)
5.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수 수목 생장으로 인한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가림현상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 및 가로경관을 고려한 전지·전정 제도화 가로수 관리인식표 부착법 개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생육을 고려한 인식표 부착법 제도화 * 가로수 생육을 저해하는 못질 금지 및 현수막 부착끈 제거 등 <p>☞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도시숲경관 사업계획</p>	'15년 사업계획 ('15.1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7)
6. 대부료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림 대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증가율 (9%) 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대부료 (20/1,000)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림 대부료 연간 증가율 하향 조정 및 감면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증가율 : (당초) 9%→(변경) 5%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대부료 감면 (당초) 20/1,000→(변경) 10/1,000 <p>☞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소관법령>입법 및 행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상반기)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8)
7. 공·사유림 교환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지방산림청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확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 1차 소속기관과 제주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년 상반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시 자문대상 기준 - 10ha 이상인 경우 <p>〈신설〉</p>	<p>별자치도에 확대 구성하여 국유 재산 처분 시 사전 검토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시 자문대상 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광역시 : 1ha이상 - 제주특별자치도와 시(도농복합읍·면제외): 3ha이상 - 그 밖의 지역 : 5ha이상 공·사유림 교환 추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취득재산의 면적이 처분 재산의 면적보다 크도록 면적 규정 신설 <p><small>☞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소관법령>입법 및 행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small></p>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5)
8. 자연휴양림 설치가능 시설 확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휴양림 내 설치 가능시설에 다음 사항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 : 트리하우스 - 편익시설 : 모노레일 - 체험시설 : 로프체험시설 - 체육시설 : 산악자전거시설·행/페러글라이딩 시설 - 안전시설 : 방송시설 <p><small>☞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small></p>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2. 4)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9.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사고로 인하여 이용객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p><small>☞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small></p>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 (‘14. 12. 15)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0. 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	○ 치유의 숲 면적기준 - 국가 및 지자체 : 50만㎡ 이상 - 그 외 : 30만㎡ 이상	○ 치유의 숲 면적기준 <table border="1"><tr><th>구분</th><th>국가 및 지자체</th><th>그 외</th></tr><tr><td>일반지역</td><td>50만㎡ 이상</td><td>30만㎡ 이상</td></tr><tr><td>특별시, 광역시 지역</td><td>25만㎡ 이상</td><td>15만㎡ 이상</td></tr><tr><td>도서(섬) 지역</td><td>-</td><td>10만㎡ 이상</td></tr></table>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국가 및 지자체	그 외	일반지역	50만㎡ 이상	30만㎡ 이상	특별시, 광역시 지역	25만㎡ 이상	15만㎡ 이상	도서(섬) 지역	-	10만㎡ 이상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2. 4)
			구분	국가 및 지자체	그 외										
일반지역	50만㎡ 이상	30만㎡ 이상													
특별시, 광역시 지역	25만㎡ 이상	15만㎡ 이상													
도서(섬) 지역	-	10만㎡ 이상													
1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	〈신설〉	○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받은 경우 -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 설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 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 한 경우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14. 12. 4)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 -4124)												
12.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	○ 치유의 숲에 한정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욕 장 또는 숲길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14. 12. 4)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124)
13.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기준 -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학과 학위 - 산림치유 관련 근무 경력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추가 <p>☞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p>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2. 4)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124)
14.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림업 또는 별목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구입 또는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p>☞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p>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15.상반기)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15.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 1인 1회 지원에 한함 (다음년도 추가 지원 불가) ○ 지원내역 - 임도·작업로 시설, 목재생산장비 등 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격 및 요건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에서 1인 2회 이상 지원 가능 ○ 지원내역에 생산 운반시설장비 (모노레일), 체험시설 추가 <p>☞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p>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5. 1월)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4195)
16.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대상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 국비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 (공모) 종자·종묘구입비 30% 내에서 지원 ○ 지원 기준 : 본당 3,760원(W 10cm × L 120cm) *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p>☞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p>	<p>(‘15. 1월)</p> <p>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8~9)</p>
17.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 - 냉동탑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탑차 및 일반 화물차량 지원 -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유통장비 추가 <p>☞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p>	<p>’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5. 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대상 품목 확대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으로 확대 <p>☞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p>	<p>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6~9) 4194, 419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 규모 완화 - 임산물 중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 중 1개 단지 규모가 25,000㎡ 미만이라도 소득창출·경영목표 달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참조 <p>☞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p>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 행지침서	
18.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 보조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 리(토양개량) 보조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개량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양개량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유기질비료 : 국고+지방비 80% 이내, 자부담 20%이상 * 정액지원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 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 행지침서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5.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수 관정시설(직접) 보조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40%, 자부담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 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 행지침서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 -4194, 4196)
19. 정원정책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및 정책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 정·운영 - 정원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코리아가든쇼 개최 - 꽃과나무 상담소 운영 (참고) 국회 홈페이지>의안정보>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5. 6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 -4249)
20.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의 사망시설 등 재해 시설 설치 시 보호구 역 해제 절차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사망시설 등 의 설치행위를 산림보호구역 내 에서 가능토록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탑 긴급복구 허용 - 사망시설, 산림재해 예방시설 	산림보호법 시행령 (14.12.4.)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설치 허용 - 병해충 예방시설 설치 허용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042-481-4247)
21.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교육을 받은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	○ 산사태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선발하고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받도록 선발기준 완화 ☞ (참고) 산 립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14. 12. 4)
			산림청 산사태방지와 (042-481-8844)
22. 산림병해충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원 자격 - 기술1·2급 : 100ha 미만	○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원 자격기준 완화 - 기술1급 : 300ha 이하 - 기술2급 : 200ha 이하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림보호법 및 시행규칙 ('14.12월)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269)
23.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	○ 생산확인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 30일	○ 생산확인표 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 - 유효기간 : 45일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14.12월)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269)
2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조사목 활용확대	<신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조사목 훈증·건조하여 제재목으로 활용 * 피해극심지역에 대량훈증 시설	'15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및 장비 지원(3개소, 42억원)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 자료실>2015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15. 1월)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76)
25.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지원기준 강화	〈신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사 업 지원은 신청자 공동명의의 사 업부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함 (사업우선순위에 추가)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 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 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15.1월)
			산림청 산림생태계 복원팀 (042-481-8815)
해양수산부			
1. 향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중규제 개선	○ 「향만공사법」과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별도로 실시 계획 승인	○ 「향만공사법」에 따른 실시계획 을 승인받으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서 정한 실시계획도 승인받은 것 으로 의제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 령>「향만공사법」 참조	향만공사법 (’15년 3월)
			해양수산부 향만물류기획과 (044-200-5751)
2. 해양심층수 부담금 요율 인하	○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	○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 의 0.5% ☞(참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1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8)
3.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 염장수산물에 사용하 는 식염의 원산지 표	○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 면제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식염의 원산지표시 강화	(‘15. 1월)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044-200- 5448)										
4. 연안어선 선박량 제한 상향 조정	<table><tr><td>연안개량안강망어업</td><td rowspan="4">8톤 미만</td></tr><tr><td>연안선망어업</td></tr><tr><td>연안통발어업</td></tr><tr><td>연안조망어업</td></tr><tr><td>연안선인망어업</td><td rowspan="4">10톤 미만</td></tr><tr><td>연안자망어업</td></tr><tr><td>연안돌망어업</td></tr><tr><td>연안복합어업</td></tr></table>	연안개량안강망어업	8톤 미만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10톤 미만	연안자망어업	연안돌망어업	연안복합어업	○ 10톤 미만으로 상향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개바다>보 도자료>어선 제한톤수 늘고 과징금 크게 올라	수산업법 시행령 (‘15. 3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 5517)
	연안개량안강망어업	8톤 미만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10톤 미만												
연안자망어업													
연안돌망어업													
연안복합어업													
5.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 2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개바다>보 도자료>어선 제한톤수 늘고 과징금 크게 올라	수산업법 (‘15. 3월)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 5563)										
6. 수산자원보호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허용행위 확대	① 일반음식점 등 건축불가 ② 24m 미만 선박수리건조 ③ 농업용 및 수산업용 창 고시설 건축 ④ 수산업을 위하여 물건 쌓아 놓는 행위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자동차 야영장, 어항 편익시설 설치 허용 ② 40m 미만 선박 ③ 농업용 및 수산업외에도 선박시설 과 선박용 창고시설 허용 ⑥ 농어업 및 수산업과 선박시설, 선 박용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시 행령 (‘15. 1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 5531)										
	7.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벌칙 강화	○ 환수(부당수령액) ○ 처벌(없음)	○ 환수(부당수령액의 2배) ○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15. 4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새소식>보도자료>수산업직불금 부정수급못한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5)
8.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이 쉬워집니다	① 수협 설립인가 기준 중 사업규모 기준 폐지	○ 사업규모기준(지구별 수협 100억원 이상,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 수협 80억원 이상)	○ 사업규모기준 폐지 ☞(참고)해양수산부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4. 12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
	② 일선수협 상임이사 자격기준 완화	○ 상임이사 자격(수협이나 은행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공공기관, 연구·교육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가능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4. 12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
9. 배타적경제수역 입어 어획물운반선 체크 포인트 시범실시		○ 신설	○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시범실시 ○ 조건부합 일부어선 모범선박 지정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 연내 공동감시 실시	2015년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14. 12월)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5565) 해양수산부 서해어어관리단 (061-240-7970)
10. 수로도서지		○ 종이해도 :16,500원	○ 종이해도 : 18,300원	측량·수로조사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판매가격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해도 : 8,200원 조석표(한국): 12,4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해도 : 9,100원 조석표(한국) : 13,700원 * 기존가격대비약 11%인상 <p>☞(참고) 국립해양조사원홈페이지>정보마당>해양조사관련 법률정보>고시>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별표)</p>	<p>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1월)</p> <p>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료과 (051-400-4312)</p>
11. 국립해양박물관 법인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임시 조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산부 산하 법인(공공기관)으로 운영 <p>☞(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현행법령>국립해양박물관법</p>	<p>국립해양박물관법 ('15. 4월)</p> <p>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051-309-1721)</p>